

# “인천시, 미래 교통수단 개인형 자율항공기 메카된다”

(PAV)

융합기술로 전국 최초 수행기관 선정  
3년간 경제 유발 효과 연간 5000억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발달을 거듭한 자동차산업은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결국 드론 및 항공산업과 융합되면서 PAV(개인형 자율항공기)라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발달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PAV를 부르면 무인 조종되는 PAV가 공상과학 영화처럼 도로 위를 떠서 운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과학기술의 발달로 PAV가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 각국이 PAV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PAV시대 도래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국내 최초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모하는 PAV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인 '유인 자율운항을 위한 멀티콥터형



인천컨소시엄 PAV 비행체 이미지.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의 수행기관으로 인천지역 컨소시엄이 지난 2018년 9월에 선정돼 총 43억원 규모로 PAV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초 정부과제에 선정된 인천컨소시엄은 드론전문 기업인 ㈜숨비, 모터전문기업인 ㈜에스피지, 연구기관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IBITP(인천경제산

업정보테크노파크) 및 인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컨소시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컨소시엄 및 UNIST 컨소시엄 등과 경쟁에서 주관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 PAV 관련 연구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인천컨소시엄은 PAV의 핵심 요소기

술인 유인자율운항 제어시스템 및 고성능 BLDC 모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상 비행체의 시스템 분석, 개발구성품의 성능검증, 탑승자 보호공간(Cockpit)을 추가한 유인자율운항비행체를 제작함으로써 PAV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PAV는 Air-Taxi를 포함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으로 개개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Door-to-Door)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소재·전자·자동차·항공 산업의 발달과 융합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이 되고 있다.

2019년에 PAV관련 정부사업비는 약 41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NASA와 보잉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드론 산업은 2023년까지 약 25만대 수준의 생산량과 1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PAV의 원천 기술개발사업을 선점하

며, 지역의 핵심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유인자율운항비행체 관련 인프라를 인천을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PAV 기술이 상용화되면 군사 및 치안 유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지역에 화물·의료 서비스 및 레저 분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 향후 3년간 PAV 관련 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약 5000억원이며, 고용 창출 효과는 약 3000명 정도로 전망된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산업기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산업인 PAV산업을 지역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PAV산업은 앞으로 인천지역의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도서지역 긴급 구호와 물품 배송, 치안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 편의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 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첫 도입... 월 10만원

정책으로는 노후 지원에 한계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결 기대

서울 중구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구는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서울시에서 노령화 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 위험도가 극에 달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에는 구 전체 예산 4300억원의 3.6%인 156억원이 투입된다. 서 구청장은 “기초단체와 지방정부는 복지 확대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예산을 늘여나가고 예산 다이어트로 소모성, 전시성 행정과 선심성 예산을 삭감할 경우 재원 확보가 충분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서양호 중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지급된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도입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1632원이다.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정부 정책만으로는 노인들의 노후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파악, 이를 수급자 지원액에서 공제해 실질적으로 연

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뺏기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 파악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월부터 공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협의가 늦어지면 소급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 영등포 밀가루공장, 문화공장으로 재탄생

서울시 1호 민간주도형 재생사업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영등포에 세워진 밀가루 공장이 82년 만에 문화공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구상안을 6일 발표했다. 23개 동을 아우르는 대지 면적 총 1만 8963㎡ 규모의 밀가루 공장은 내년 8월 문화공장으로 새로 단장해 문을 열 계획이다.

지난 1936년 영등포에 건설된 밀가루 공장은 1958년 대선제분이 인수했다. 공장은 사일로, 제분공장, 목재창고, 대형 창고 등 총 23개 동으로 구성됐다.

과거 영등포는 방직, 제분 등 다양한 공장이 입지한 제조산업 거점공간이었다. 대선제분 동쪽으로는 경성방직이, 서쪽으로는 종원방직 경성공장이 이웃해 한 국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과 상업시설이 들어서 과거 흔적이 사라졌고, 대선제분만 온전한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1호 '민간주도형' 재생사업으로 시와 토지주,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졌다. 사업시행자

인 아르코스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 재생계획 수립부터 리모델링, 준공 후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해 진행한다. 아르코스는 재생사업의 경제적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익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행·가로환경 인프라 정비 등 행정 지원을 한다.

대선제분 공장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활용하면서 공간이 가진 스토리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는 '가치중심' 방식으로 리모델링된다.

1단계 사업으로 전체 23개 동 중 14개 동을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 상업시설과 전시장, 역사박물관, 창업지원공간 등의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현재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12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19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대규모 구조물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

문화공장은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된 런던의 '테이트 모던', 옛 맥주 양조장을 복합문화시설로 만든 베를린의 '쿨투어 브라우 어라이'를 모델로 한다.

/김현정 기자

## '광역기부식품 북부물류창고' 신호탄

지역상 효율성 위한 필요성 높아져

경기북부에도 기부식품 물류창고가 들어설 전망이다. 매해 기부식품이 증가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해서다.

경기도는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구 경기푸드뱅크) 북부물류창고' 설치를 위해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불을 댕겼다.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는 전국 지원센터와 협력해 식품관련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을 기탁 받아 저소

득·취약계층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에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 중인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물류창고' 한 곳이 소재해 있으나, 많은 인구와 광범위한 면적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상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에도 기부식품 물류창고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최근 기부·나눔문화 확대 등으로 푸드뱅크·마켓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기탁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북부물류센터 건립 등 관련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이 같은 수요증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북부 기부 식품 접수 규모는 2015년 약 82억 원에서 2016년 90억 원, 지난해에는 93억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 용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뉴딜사업 추진

사업 대상으로 3개소 합쳐 50개소

경기도가 용인시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중앙동(1), 신갈동(1), 구성 마북(1) 등 3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총 47개소에서 용인 3개소를 합쳐 7개시 50개소다. 도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6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

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과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경기=김승열 기자